

## 정부, 에너지 체계 혁신...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% 이상·전기·수소차 40% 보급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기후에너지환경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플랜트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	-----

□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재생에너지 100GW 보급·전기·수소차 40%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 전환 추진

- 중동전쟁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과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이 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
  -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 필요
  - AI 데이터센터·피지컬 인공지능\* 확산·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
    - \* 로봇·자율주행차·드론 등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기기에 탑재되어 현실 공간에서 인식·판단·동작을 수행하는 AI
-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(① 재생에너지 20% 이상 ② 녹색 제조 세계 3강 ③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) 10대 과제 추진
  -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%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
  -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%를 전기·수소차로 채우는 목표 조기 달성과 함께 경차·액화석유가스(LPG) 택시·렌터카·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

□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·전력시장제도 전면 개편과 국민 참여형 에너지소득 실현 모델의 전국 확산을 동시 추진

- 재생에너지 보급제도(RPS)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의 개편 및 송전 비용·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 추진
  - 재생에너지 보급제도(RPS)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
  - 송전 비용과 지역별 전력 자립도·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여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
- 시간대별 요금제의 단계적 시행과 함께 햇빛·바람 소득 마을 조성을 통한 국민 1,000만 명 참여형 에너지소득 실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 추진
  -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정책에서 명시
  - 햇빛·바람 소득 마을의 전국 조성 및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의 투자 참여 방식 도입을 통해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동시 지원

※ 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6.04.06.), 정부, 에너지 체계 혁신...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% 이상